

기업 형사 리스크 덜고 불공정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최대 100억원 과징금
단순 실수·경미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전환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이중 전략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억지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행정상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현

행 제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위법 행위의 성격과 과급력에 따라 제재 수단을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경미 위반은 행정질서별로 정리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형벌보다 더 강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변화는 대리점·하도급·기맹 분야에서의 과징금 대폭 상향이다. 공급업자 who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우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보다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불이행 시 훨씬 큰 경제적 책임을 물겠다는 취지다.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는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역시 50억 원으로 상향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벌과 과징금을 병용하는 구조로 정비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된다.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즉시 형사 처벌 하던 조항은 폐지된다.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재보다 2.5배에 해당하는 5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기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과 형별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과징금 한도 역시 50억원까지 확대된다.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의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기존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률 과징금 기준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도 과징금 한도는 매출액의 20% 또는 1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도 대폭 강화돼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를 분명히 했다.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한다.

그간 형벌이나 시정 조치 위주로 대응해 왔던 탈법 행위와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추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제재 방식이 바뀐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적용하던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대신 과징금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반면 고의성이 없거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바뀐다.

금형은 과태료로 바뀐다.

관계없는 자가 '금융투자'나 '증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던 정역형 역시 과태료로 전환된다. 동물미용업자나 식품제조업자의 단순 신고 누락 등도 형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진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신성장전략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신임 부행장에 강지훈·김홍화·김원주·박성민·박대하
여성임원 2명으로 늘어…“영업력·미래금융 기반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0일 본부 조직개편과 함께 강지훈, 김홍화, 김원주, 박성민, 박대하 부행장보 5명을 새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원 5명(이강현, 박성우, 김재준, 임양진, 김은호)의 퇴임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갖춘 내부 인재를 전면에 배치해 조직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여성 임원을 발탁해 여성 임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별 전담 조직을 신설·재편하고, 업무 실행력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총괄하는 컨트롤티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고객 자산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자산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카드·WM·신탁 기능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 기반의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비자수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중심의 성장 구조와 IB·AI 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경쟁력 있는 지방은행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aura@gwangnam.co.kr

서기웅 한국광기술원 원장 취임 “연구개발 혁신 강화”

서기웅 제9대 한국광기술원 원장(사진)이 30일 취임했다.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기웅 신임 원장은 “빛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광융합기술 글로벌 선도기관”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글로벌 혁신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의 평가·보상 체계를 정착시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기웅 신임 원장은 지난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 왔다. 광융합산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점에서 광융합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는다. 임기는 3년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 삼우산업

전남 담양군 수복면 한수동로 492

Tel) 061-381-3436

